"섬진강 소수력 발전소 건립 안된다"

곡성군 작년 12월 공사 발주…구례군 환경단체·이장단 반대성명서

구례 군민들이 곡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소수력 발전소 건설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례군 10개 환경단체장 및 이장단은 지난 2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곡성군청을 항의방문,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곡성 소수력발전소 건립 반대성명서를 전달했다.

구례군 환경단체는 "섬진강은 우리나라 강 중 유일한 생태 순환적 자연형 하천"이라며 "곡성 소수력 발전 건립으로 영향을 받은 하류지역 주민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구례군의회 역시 지난달 30일 "소수력 발전소 건립은 그동안 섬진강 수계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해 온 섬진강 환경보전에 역행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구례군을 비롯한 하류지역 시·군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환경부·영산강 유역환경청·익산 국토유지관리청 등 관련 기관에 보냈다.

또 곡성군이 지난해 11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성검토협의를 신청한 뒤 이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12월 말께 공사를 발주한 것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특히 소수력 발전소가 건립되면 바닷물 역류로 재첩 등 양식업에 종사하는 지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섬진강 수계인 하동과 구례지역에서는 연간 재첩 채취로 170억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편 곡성군은 오곡면 침곡리 섬진강에 지난 2006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92억3천6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발전시설 505㎾ 4기(총 2천20㎾)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곡성군은 이미 설치돼 있는 1.8m 높이의 보를 5.4m로 높여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306m의 어도(魚道)도 설치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무공수훈자 위패 제막 광주시와 광주지방보훈청은 3일 오전 광주시 남구 사직공원에서 보훈가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과 월남전 등에서 공을 세운 무훈수훈자들을 기리기 위한 위패 제막식을 가졌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노인장기요양보험 내달부터 시행

복지부 수급 대상자 10만명 선정

간병·수발비용 15~20%만 부담

3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가까운 요양소나 자신의 집에서 간병, 수발 등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부터 등급 고지…17만명 대상=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접수 개시일인 지난 4월15일부터 현재까지 노인요양보험 혜택을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14만여명에 달했다. 지난달 말 현재 광주에서 5천3명, 전남에서는 1만2천832명이 신청을 마친 상태다.

복지부는 현재 이들의 70% 가량인 약 10만명을 노인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 조사요원이 신청자의 가정에 찾아가 급여대상 희망자의 신체상태 등을 실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각 시·군·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가 1~3등급 까지의 수급 대상자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0일부터 수급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등급을 통보한다.

◇전체 요양비의 15~20%만 부담=노인요양보험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시설 또는 자신의 집에서 간병과 수발, 가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인근 요양 시설에 입소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돈은 전체 요양비용의 20%이고, 자택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경우 15%만 부담하면 된다.

요양시설이 없거나 도우미가 찾아가기 힘든 도서 및 산간벽지에 사는 노인들의 경우엔 월 15만원의 요양보험금이 지급된다.

요양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와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수가도 다르다. 복지부에 따르면 1등급은 3만8천320원, 2등급은 3만3천320원, 3등급은 2만9천20원으로 책정됐다.

◇'사각지대' 없나=복지부는 시행 첫해인 올해 17만명을 1차 수급 대상자로 선정해 노인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노인인구의 7% 안팎인 35만~40만명 가량이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일단 중증 노인성 질환자만 혜택을 주기로 한 셈이다.

이는 노령연금 도입 등 노인 관련 복지 서비스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 복지부는 2010년까지는 23만명까지 수급 대상자를 확대해 4등급을 받은 노인 인구의 절반 가량이 노인요양보험의 '우산'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현주기자 ahj@·연합뉴스

당신은 우리부대 특급전사

31사단 장병들 대상 자격인증제 시행

육군 31사단(사단장 서길원 소장)이 '강한전사·강한군대' 육성을 위한 '특급전사 자격인증제'를 시행해 화제다.

3일 육군 31사단에 따르면 사단 전 장병이 자발적으로 전투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급전사 자격인증제'(이하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제는 위관 이하 장병을 대상으로 ▲개인화기 사격 ▲체력검증 ▲정신전력 등 3개 과목을 평가한다.

사단의 최정예 특급 전사를 선발하는 평가 기준도 ▲개인화기 사격 19발 이상(특등사수) ▲체력검정 전 종목 특급 ▲정신전력 9개 과제 90점 이상으로 까다롭다.

특급전사로 선발된 장병들이 서길원 31사단장으로부터 금장을 수여받고 있다.

분기별로 선발되는 특급전사들은 '금장 휘장'과 '자격증'을 수여받고, 사격훈련 및 병 기본 훈련시 지도조교로 활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5·18 기념재단·5월단체

5·18교육관 건립 장소 갈등

항쟁 동지회 "5·18공원 밖으로 옮겨야" 농성

5·18 기념재단과 5월 관련단체 일부 회원들이 5·18 교육관 건립부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5·18 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소속 회원 20명은 지난 2일부터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자유공원 내 들불탑 뒤에 건립될 예정인 '5·18 교육관' 부지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5·18 교육관(지하 1층, 지상 4층)은 연 면적 2천633㎡로 국비 50억원이 투입된 민주화운동 교육체험 공간이다.

이들은 '5·18 교육관 건립부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광주시와 기념재단이 교육관 건립과정에서 우리와 협의하지 않았다"며 "교육관 건립은 찬성하지만 부지는 자유공원 인근 육묘장(1만3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교육관은 이사회 보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추진됐고 실시 설계까지 마친 상태"라며 "지난 3월 교육관 건립 주체가 광주시로 변경됐으나 그동안 업무를 추진해 온 만큼 앞으로 시와 5월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합의점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사모·지만원씨 고소

5·18 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구속부상자회 등 5월 관련 단체는 지난달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을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 3곳과 군사평론가 지만원(66)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전사모 등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이 '5·18은 특수부대의 공작이다' '5·18은 폭동이다' 등 비방성 글을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올려 5·18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씨도 '5·18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올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완도 60대 부부 유족들 "과실 아닌 타살" 주장

지난 3월 완도의 한 가정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부부의 사인을 놓고 유족들이 "과실이 아닌 타살"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3일 완도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오전 10시께 완도군 고금면에 사는 조모(67)씨 부부가 자신의 집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우유배달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사건 당일 조씨 부부가 먹었던 미역국에는 농약 성분의 독극물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숨진 조씨 부부가 곧 태어날 손자를 손꼽아 기다려 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타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전국에 '대포차' 800여대 유통·판매

영암서 일당 4명 붙잡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속칭 '대포 차량' 800여대를 전국에 유통·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암경찰서는 3일 속칭 '대포 차량' 소유자들에게 자동차 매매상사 명의를 빌려주고 수억원을 챙긴 자동차매매업자 박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오모(3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영암군 영암읍에 자동차 매매업 전문 유한회사를 차린 뒤 2006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줘 차량 804대의 '대포 등록'을 돕고 모두 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차량매매 사이트들에 접속, 자신들의 명함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차종에 따라 20만~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